



Read the full book on:  
[10.1787/growth-2012-en](http://dx.doi.org/10.1787/growth-2012-en)

---

## 성장을 위한 2012년 경제정책 개혁

### 국어 개요

- 매년 발간되는 OECD의 구조개혁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들의 구조정책 동향을 주로 다루면서 OECD 각국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공 등의 주요 신흥경제국의 실질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의 우선순위를 확인시킨다. 또한 조사된 모든 국가의 개혁 시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분석 단계를 거친다.
- 본고에서는 국가들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각자의 경제적 성과와 구조 정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들을 제공한다. 각 사안별로 연구된 주제가 여러 개 된다.

2005년부터 OECD 구조개혁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별로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의 우선 순위를 분석하여 확인시켰으며 2011년부터는 OECD와 긴밀히 협력하는 주요 비회원국인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공 등의 BRIICS를 포함시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 정부는 시민들의 장기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개혁 시행에 반영할 수 있는 도구를 얻게 된다. 본고의 분석 내용은 2009년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후로 시행된 G20의 상호평가 과정에 사용되고 있다.

금번 구조개혁 보고서에서는 경제위기 때부터 2007-11년 동안 각국이 구조개혁부문에서 이룬 진척 상황을 평가한다. 위기는 새로운 정책 과제와 교훈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 제시된 많은 우선과제들이 필요 사항이라는 것이 보다 명백히 드러났다. 위기 때부터 몇 년에 걸쳐 나타난 주요 개혁패턴은 1장의 개요에서 요약하고 2장의 국별 검토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전 구조개혁 보고서에서 확인된 우선과제 개혁을 위한 각국 대응력을 고려하면 개혁 속도는 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전반적으로 늘었다.
- 그렇지만 개혁의 속도와 성격은 위기의 여러 단계를 거치며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2008년 경기침체와 함께 초기에 수요 안정화와 실업자 소득 지원에 대한 긴급한 요구가 우려되면서 OECD C13 국가 구조개혁이 늦추어졌다. 중기적 재정 건전화에 대한 요구가 시급해지면서 퇴직제도와 복지제도, 공공부문 개혁 등과 같이 재정 조정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분야에서 개혁이 시행되었다.
- 위기와 잇따른 경기회복 부진은 특히 개혁이 가장 시급했던 OECD 국가의 구조 개혁 시행에 촉매제가 되었다. OECD 국가 중 일반적으로 개혁이 보다 시급한 저소득 국가들과 위기 간 최대의 실업률 증가를 보였던 국가들이 각자와 관련된 구조개혁 우선순위에 따라 더 많이 행동했다.
- 공공재정의 건전화 요구와 국채 급증으로 인한 재정 압박은 재정 긴축이 개혁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였던 과거의 사례들과는 반대로 2009년 이후 개혁에 또 다른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가장 최근의 위기 단계에서는 잠재성장 향상, 가격경쟁력 회복, 그리고 유럽 채무위기의 영향을 받은 국가의 재정지속가능성 회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 설계된 정치적으로 민감한 개혁들이 가속화되는 것을 보았다.
- BRIICS 국가에서는 위기의 여파가 비교적 가볍고 단기적이었지만 보다 포용적인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조치의 필요성이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본고에서 다뤄진 모든 신흥경제국들은 교육제도의 품질과 포괄성을 향상키 위한 정책들을 시행했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장벽 해소와 법치주의 증진과 같은 다른 중요한 우선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덜하였다.
- 최근 몇 년간 행해진 것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 상황에서 일자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 전직근로자를 교육시키고 직장복귀를 장려키 위한 목적의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의 지속성을 줄일 수 있다. 일단 노동시장의 수요가 확고히 회복되면 이러한 정책들을 재정건전화 조치로부터 보호하고 실업수당에 관한 개혁조치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확대시킨 실업수당 수혜대상의 일부는 영구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반면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수당 규모 및/또는 수혜기간의 증가는 단계적으로 폐지시킬 수 있다.

\* 성장친화적 조세개혁은 경기회복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조세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시행된다면 재정 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조치에는 조세지출 제거, 조세부담을 부동산세, 소비세, 환경세와 같이 고용과 성장에 덜 해로운 세원으로 이전하는 것 등이 속한다.

\* 많은 OECD 국가와 특히 유럽에서 우선과제인 제품시장개혁은 신속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소매 무역과 전문직 서비스와 같이 보호된 부문을 대상으로 특별 시행된다면 성장에 상당히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또 다시 불경기를 겪는 경제권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제도 활용처럼 취약한 경제활동에 미치는 노동시장의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적합한 방안을 비롯하여 경제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정책 대응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경제위기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행동조치의 동기가 되었던 반면 구조개혁의 일부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수요를 더 취약하게 만들면서 단기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4장에서는 30년 동안 OECD 국가들의 개혁 경험을 토대로 구조 개혁의 단기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신속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개혁의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담고 있다:

- 구조 개혁이 가져올 수 있는 단기의 부정 효과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듯하다. 단기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 꽤 신속한 성장을 촉진시킬 것 같은 구조개혁들도 몇몇 있다.

- 그렇지만 구조개혁에 따른 혜택이 완전히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몇 년이 소요된다.
- 또한 경기 여건이 개혁의 단기 효과와 중요한 관계를 갖는다. "어려운 시기"에는 특히 실업 수당제도, 일자리보호 등과 같은 특정 노동시장개혁이 경제 사정을 일시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몇 차례 입증되었다. 따라서 여전히 침체된 경제권에서 현행 정책이 확실히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이러한 개혁들은 일단 노동시장이 회복의 징후를 명백히 보여줄 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 잘 설계된 노동과 제품시장에 대한 일괄적 개혁이 최대의 이득을 가져오면서 특정한 개별적 개혁의 이행비용을 경감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제품시장 자유화를 일자리 보호나 실업수당개혁과 병행하면 후자와 관련된 실질급여 하락의 여지가 적어진다.
- 효과적인 홍보 전략과 규제가 잘 된 견실한 금융 부문에 힘입어 신뢰가 높아지면서 가계와 기업이 앞으로 개혁이 가져올 소득이득을 지출토록 유도한다면 구조 개혁의 단기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평가는 구조개혁들, 결과적으로는 구조 개혁 보고서에 담은 일부 우선과제들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우려는 특히 경제 위기에 맞서 우선적으로 재정건전화 실현을 위해 현재 개혁조치를 이행하는 국가에서 더 불거졌다. 5 장에서는 불평등 감소와 경제성장 촉진 간의 상호보완 또는 상충 관계의 여부를 검토한다:

- 많은 구조개혁들이 1 인당 GDP 장기 성장을 도모하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을 줄임으로써 이중 이익을 수반한다. 중등교육수준의 인적자본 축적을 더욱 장려하고,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며,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완화시키고,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개혁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한계세율 인하와 동시에 조세지출 감소도 2 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전형적 요소다.
- 반대로 성장과 소득분배 목표 간에 상충을 야기할 있는 개혁들이 있다. 예를 들어, 조세부담을 근로 및 법인 소득세에서 소비세로 옮기면 근로, 저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지만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 전이는 이러한 상충을 해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소득 분배는 정책과 제도의 변천이나 기술 변화, 세계화 등과 같은 장기 추이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으며 최근 금융위기와 같은 거시경제적인 충격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때론 그 영향이 지속적이다. 30 년에 걸친 40 개 OECD 국가와 BRIICS 국가에 대한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6 장에서는 거시경제적 충격이 소득과 고용에 미치는 분배 효과와 이들의 형성에 있어서의 정책과 제도의 역할을 살펴보는데 이득을 보는 자와 손실을 보는 자를 확인하고 위험분담과 성장 목표 간의 분절을 부각시킨다:

- 빈곤층 소득과 청년 일자리는 좋은 시기에는 물론 더 신속히 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지난 금융위기의 경우를 보면 고소득 가정과 빈곤층이 중산층보다 심한 타격을 받았다.
- 경제 전반에 걸친 노동인력의 재할당을 촉진하는 등 성장과 일자리에 도움이 되면서 위험분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혁조치로는 제품시장 자유화,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장벽 제거, 노동에 대한 높은 세금 감축 등을 들 수 있다.
- 과거에 일어난 충격의 여파 속에서 많은 사회보장제도들이 취약층의 일자리나 소득 손실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일자리와 소득 측면에 비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설계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특히 관대한 실업수당과 높은 최저임금, 엄격한 고용 보호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
- 각국의 정책수립이 어느 정도로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노동 재할당을 촉진하는지에 따라 4 개 집단으로 국가들을 분류할 수 있다. 유럽대륙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득 차원의 위험분담이 제공되는 반면 영어권과 아시아권 OECD 국가들은 주로 재할당을 촉진하는 제도에 의존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2 개의 제도를 갖춘 것으로 보이며 신흥국들은 어떠한 제도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위험분담과 성장의 2 개 목표를 모두 실현키 위한 효과적인 정책 혼합은 항상 2 개 목표에 도움이 되는 재할당 촉진 제도와 최저 비용으로 특정 보장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된 사회보장제도를 결합하는 것이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ad the complete English version on OECD iLibrary !**

OECD (2012), *Economic Policy Reforms 2012. Going for Growth*, OECD Publishing.

doi: 10.1787/growth-2012-en